

“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 헌정사에 ‘빛의 혁명’ 남긴다

》1면 ‘12·3 내란 1년…’서 계속

2차 종합특검, 국회가 판단할 것
특별수사본부 꾸려 계속 수사해야
민주주의 위기 평화방식으로 극복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받는다면
갈등·분열 국가들에 전환점 될 것

또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심리전단 살포 작전”을 언급하며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긴 어렵다. 특별수사본부든 무엇이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고 되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

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빛의 혁명’을 헌정사에 남기겠

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시민의 힘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내란 청산·사법개혁 다짐” vs 野 “의회폭거 맞서기 위한 계엄”

12·3 비상계엄 1년

與, 시민대행진·기억행사 등 준비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필요”

계엄해제 표결한 장동혁, 사과 없어
송언석, 초·재선 의원 등 사과문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과 극복을 위한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가 계엄은 의회 폭거 때문이라고 메시지를 내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계엄 1년 맞아 ‘내란 청산’ 강조한 與

더불어민주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 내란 저지 1년 시민사회 대표단 간담회, 12·3내란 저지 1년 특별좌담회,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 참여를 준비하고 독려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오전 국회 본청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국회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 쿠데타였다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추경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 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가 3일 오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이란 이름으로 법원조

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로 대체하고 법관 징계처분 강화, 대법관 퇴직 후 전관예우 근절 등을 담았다.

◆계엄 해제 표결했으면서 ‘의회 폭거 탓’이라는 野 당 대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찬성 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 었다. 장 대표는 당내 소장과 의원들에게 계엄 1년을 맞아 강도 높은 사과와 반



김용태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재선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성을 발표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을 주축으로 한 의원 25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2·3비상계엄

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대표 시절 발생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쿠팡 ‘원아이다’ 정책으로 결제정보 유출 여부 확인해야

정무위, 쿠팡 사태 긴급 현안질의
금감원, 쿠팡페이 대한 조사 나서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불러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결제정보까지 유출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정무위는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이어 3일 오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노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긴급현안질의

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과 이석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당국자와 쿠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고객의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이 결제 정보 유출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쿠팡은 단순한 유통기업이 아니다. 전자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쿠팡페이, 여신금융사인 쿠팡파이낸스를 거느리고 있다”며 “쿠팡은 회원가입을 하

게 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쿠팡에 가입되게 하고 있다. (이런바) 쿠팡의 ‘원아이다(ID)’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업무망만 유출되고 쿠팡페이가 금융망은 유출 안 됐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쿠팡은 금융망이 침해되지 않았으며 전자금융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는데,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2조를 보면 이용자 번호(ID)와 비밀번호를 접근 매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일한 아이디로 쿠팡페이에도 자동가입되게 되는데, 접근매체가 명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금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기반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금융위원장에 알리고 금융감독위원장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어 “금감원에서 쿠팡페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며 “쿠팡페이 서버 유출 조사, 원아이다 금융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2014년도에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1억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며 “쿠팡페이의 위반 사항도 거기에 준하는 것이다. 그때처럼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해달라”고 이석원 금융위원장에게 당부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박대준 대표이사에게 “결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박 대표이사는 “현재까지 침입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조사 중”이라며 “아직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